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안전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집

돌부리는 뽑아내GO
돌다리는 두드리GO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CONTENTS



Ⅰ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1. 건축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08
2.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09
3.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10
4. 피난 안내 · 유도 정보 제공 11
5.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 강화 12
6. 취침시설 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13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14
8.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15
9. 유 · 도선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개선 16
10. 승선신고서 작성 · 관리 개선 17

Ⅱ 불편으로부터 국민을 편안하게

11.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20
12.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조정 21
13.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22
14. 소방시설업 One-Stop 민원서비스 도입 23

Ⅲ 규제 부담으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15. 소방산업 및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26
16. 소화기구의 국제기준에 맞는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 27
17.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28
18.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 29
19.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기간 축소 30
2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예외 사유 확대 31
21.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기준 개선 32
22.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도입 33



안전혁신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국민안전처의 규제개선은 균형을 지향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된 것도 많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균형감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유연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은 200%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요?

-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 규제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혁신이 목표입니다.
  안전혁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를 강화할까요?

-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미래 재난 예방에 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강화합니다.
- 육상안전, 해상안전, 화재 예방, 생활안전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제강화를 추진합니다.
-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 지적된 규제개선 과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정하고 집중 관리합니다.

어떤 규제를 완화할까요?

-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유연하게 완화합니다.
-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기술의 발달로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는 폐지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

돌부리는 뽑아내 GO!
→ 규제혁신으로 경제 활성화

돌다리는 두드리 GO!
→ 합리적 규제로 국민행복 실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건축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취침시설 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국민이 불편 없는 사회

-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 소방시설업 One-Stop 민원서비스 도입

규제부담이 줄어든 기업

- 소방산업 및 소방 기술 사업화 지원
-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기준 개선





I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1. 건축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08
2.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09
3.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10
4. 피난 안내 · 유도 정보 제공 11
5.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 강화 12
6. 취침시설 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13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14
8.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15
9. 유 · 도선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개선 16
10. 승선신고서 작성 · 관리 개선 17





만약에…

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
2014년 고양버스종합터미널 공사현장 화재.
만약 그 공사장에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장에 기본적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공사장은 페인트, 스티로폼 및 용접 작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었습니다.
-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초기 진화를 위한
간이소화장치(소화전), 경보시설, 대피로를 안내해 주는
피난유도선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015. 1.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초기 진화가 가능해지고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사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약 26,980여 개소의 신규 공사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므로 연간 약 226억 원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만약에…

2014년 5월, 2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현장.
만약 그때 요양원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그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기존에 소규모 요양병원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 요양병원 환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 위험이 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요양병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신규 병원 : 2015. 7. 시행, 기존 병원 : 2018. 7.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여 요양병원 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540여 개소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약 743억 원의 중소기업 투자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 붕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지진 현장.
만약 그때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지진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예전부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 등의 위험이 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옥내 소화전 설비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연면적 1,500㎡, 4층 이상)의 소화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주요 구성품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도록 **'소방시설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합니다.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건축물 지진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건축물 내진설계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연간 2조 원의 시설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약에…

2013년 2월 부산의
도시화명그린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로를 알지 못해 일가족 4명 사망.
만약 그곳에 피난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난 안내 · 유도 정보 제공

재난 시 **대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안내·유도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2013년 2월 부산의 도시화명그린아파트 화재 경우처럼 대피로를 알지 못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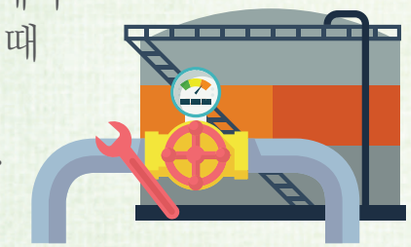
피난 유도 및 안내를 위한 **피난안내도, 표지 등**을
쉽게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피난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1년에 2회 이상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 7.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피난 유도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만약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이 엄격했다면
2014년 4월 울산 S-Oil(주) 온산공장에서
75만 배럴 규모의 탱크가 파손되었을 때
며칠에 걸쳐 원유가 흘러나오는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시설기준 강화

위험물질이 새지 않도록 **방유제** 기준을 강하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에 대한 기준이 약하다 보니 원유 누출 등과 같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균열 및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의 실링 부분 노후화로 인해 위험물이 누출될 우려가 높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S-Oil(주) 온산공장과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방유제의 재질 및 구조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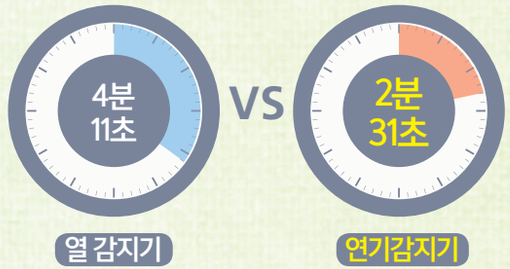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위험물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경제 · 사고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5년 1월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현장.
만약 이곳에 연기감지기가
있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시 감지 소요 시간>



취침시설 등 거실의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열감지기 대신 **연기감지기**로 안전 강화!

무엇이 문제였을까?

- 열감지기는 대부분 온도가 섭씨 70도 이상일 때 작동하기 때문에 유독성 연기가 퍼져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 화재 발생 시 조기 감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5. 3. 시행)
(화재발생 시 감지 소요시간 : 열감지기 약 4분 11초, 연기감지기 약 2분 31초)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화재 시 조기감지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연기감지기 교체 추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연기감지기 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약에…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약 65,000여 개소.
만약 이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무엇이 문제였을까?

-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서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시 입회 및 확인 규정이 없어서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안전검사 시 관리주체가 입회하여 검사자의 신원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 내용, 주체, 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5. 9.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관리주체별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신발 끈이 끼어서
다치는 등의 승강기 안전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만약 평소에 철저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를 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승강기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승강기 종류·제어반·구동기 변경 시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 설치 후 15년이 도래하거나 중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고, 중대 고장 해당 항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승강기의 종류, 제어반, 구동기 변경 시에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설치 후 15년 경과 시부터 매 3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등도 중대 고장에 포함시킴)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노후하거나 불안정한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고장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명조끼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다면,
유·도선 종사자들이
비상시 현장 대처능력이 없다면
누구의 생명도 구할 수 없습니다.



유·도선 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개선

비상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을 보관할 때 관리상 편의를 위해 잠금장치를 해놓아, 재난 시 즉각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 유·도선 사업자나 선원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상훈련이 없어서 재난 시 인명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도선 내 인명구조 장비와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운항 의무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소화, 퇴선, 선체 손상, 추락, 비상 조타, 기름 유출 등 **유형별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인명구조시설 및 장비 등을 사고 발생 시에 즉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도선 종사자 등의 사고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15면 9월에 일어난 돌고래호
침몰 사고는 허술한 승선 명부,
과다 승선으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만약 승선신고서 작성 규제를
강화한다면 승선인원 초과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개선

승선 인원 초과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승선신고서 작성·관리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다소 미비했습니다.
- 승선신고서 작성 불이행 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승선신고서 작성·관리'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승객에게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를, 유·도선 사업자에게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016. 1.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초과 승선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시 정확한 승선 명부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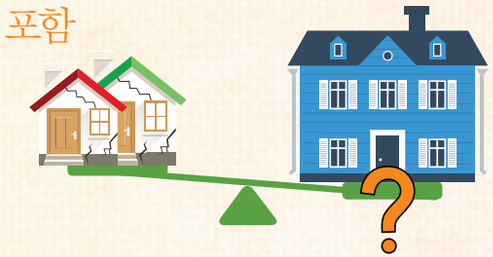


II
불편으로부터 국민을 편안하게

11.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20
12.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조정 21
13.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22
14. 소방시설업 One-Stop 민원서비스 도입 23

만약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주택소유자라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618가구, 미지급 지원금 9억 2,800만 원.
만약 2주택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킨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주택 피해 시 **형평성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에 2주택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아 지원받기가 힘들었습니다.
- 저렴한 소형 주택을 두 채 소유한 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고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을 받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연재해로 주거용 주택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확인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5. 6.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피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주거 안정이 가능해집니다.
· 주택 보유수 대신 실질적인 빈부 기준에 따라 지원하므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주 사용하는 승강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승강기나 똑같이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해야만 할까요?
만약 사용 빈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조절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조정

사용 빈도에 따라 점검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승강기의 이용 빈도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력 낭비,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규제개혁 신문고에 승강기 자체점검 비용 부담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건물이나 5층 이하 건물 승강기의 경우처럼
이용 빈도가 낮은 승강기의 자체점검 주기를
월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연장**하였습니다. (2015. 7.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승강기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 · 승강기 점검 등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촌각을 다투는 화재 사고의 피난 현장.
만약에 화재가 난 건물의 선큰 면적이
지나치게 크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선큰 : 이용자들의 보행, 휴식, 피난 등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선큰 설치기준 개선

피난하기에 좋은 **선큰**을 **설치**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초고층 건물 선큰의 설치 면적을 과도하게 규정해서 큰 면적의 선큰 설치가 건축주에게 부담이었습니다.
- 화재 시 피난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큰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 성능 개선을 위해 **선큰의 설치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선큰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피난 약자 보호를 위한 경사로 설치 및 선큰의 길이와 출입문의 너비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 4.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 경제 · 선큰 면적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건물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안전 ·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 선큰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소방서에 가고, 시공능력평가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가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민원인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업 One-Stop 민원서비스 도입

소방시설업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처리기관(소방서)과 시공능력평가 신청 처리기관(한국소방시설협회)이 달라 민원인의 불편이 컸습니다.
- 소방시설업의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신청 등은 단순한 업무인데도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므로 민원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방시설업의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하여 소방시설업에 관련한 **민원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015. 7.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 편의 · 연 1만여 건 이상의 소방산업체 관련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집니다.
- 경제 · 소방산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부담이 완화됩니다.



III
규제 부담으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15. 소방산업 및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26
16. 소화기구의 국제기준에 맞는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 27
17.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28
18.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 29
19.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기간 축소 30
2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예외 사유 확대 31
21.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기준 개선 32
22.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도입 33



만약에…

만약에 소방산업의 저변이 약하고
소방기술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화재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방산업의 발전이
곧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소방산업 및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소방산업 발전으로 사회가 더 안전해지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소방산업 창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상당수 소방업체가 타 산업과 소방 사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없어서 기술 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방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 7.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경제
- 소방산업의 전문성과 기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 창업 지원으로 약 5만 명의 일자리 창출, 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약 2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만약에…

장소에 따라 설치하는
소화기구가 달라진다면,
다양한 용도를 가진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소화기구의 국제기준에 맞는
소화약제별 적응성 재분류

효율적으로 **소화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설치장소별 적응성 분류에 따랐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 다양한 용도를 가진 건축물일 경우 어떤 소화기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설치장소별 적응성 분류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화재성상에 따른 분류로 개선했습니다. A급 화재(일반화재), B급 화재(유류화재), C급 화재(전기화재)에 따라 **소화약제 적응성 표를 개정**하였습니다. (2015. 3.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설치장소의 다양한 용도에 맞게 국민이 효율적으로 소화약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
- 소화약제의 선택적 적응이 가능해지므로 소화약제의 적용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만약에…

승강기 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안전관리를 담당할 유지관리 기술인력은 부족합니다. 만약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면 더 많은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기준 완화

기업 부담은 줄이고 **승강기**는 더 안전해지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승강기 대수는 매년 3만 대씩 증가하는 데 비해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승강기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기간이 길어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업체에서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실무경력기간을 4~6개월 감축하여 **업체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15. 11.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신속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의 원활한 양성 및 배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유지관리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회생 절차 중에 있는 소방업체는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폐업의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행정처분을 유예해 준다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대상 마련

위기의 **소방업체**가 재기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업체가 일시적인 자본금 감소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여 폐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소방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2015. 7.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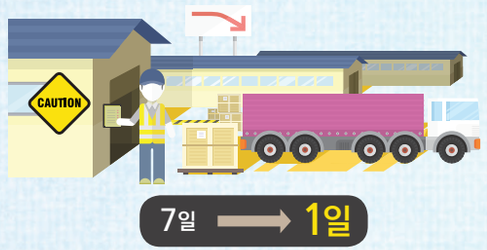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소방업체가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없이 기업회생 절차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경제 · 폐업을 방지해 줌으로써 소방기술자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연쇄 피해 방지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저장 위험물의 품명이 수시로 바뀌는 국제석유물류기지.
만약 이곳에서 품명을 바꾸려 할 때
일주일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물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위험물 품명변경신고 기간 축소

신속하고 원활한 **국제석유물류**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저장 위험물의 품명 변경 시 변경 7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석유물류 과정에서 신속한 유통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장 위험물의 **품명 변경 시 변경 1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저장 위험물 품명 변경이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경제 · 저장 위험물의 품명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는 국제석유물류 기지 운영이 원활해지고 신속한 물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완료 후 승인이 취소된 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면, 검토협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까요?
이전의 검토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예외 사유 확대

똑같은 절차는 **한 번으로** 끝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한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이 취소되었다가 해당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다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 협의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다시 확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검토협의 재이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나 좋아질까?

편의 ·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만약에 위험한 화학물질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과거 기준으로 위험물을 분류한다면 안전하게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최신 기준을 반영해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위험물분류 표지 기준 개선

최신 규정에 맞춰 위험물을 관리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기존의 국제위험물 분류표지 기준은 과거의 'UN GHS-1차'를 근거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일부 화학물질에 적용성이 떨어져서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신 국제 분류기준(UN GHS-5차 수정판) 에 맞춰
국제위험물 분류표지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2015. 5.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최신 국제규정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편의 · 현실을 반영한 국제위험물 분류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대 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 저장 옥외탱크.
만약에 탱크 점검을 위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탱크 안전 못지않게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방법에
영상초음파 탐상시험 도입

탱크의 안전 점검 시 작업자가 안전하도록!

무엇이 문제였을까?

- 100만 리터 이상의 위험물 옥외탱크의 용접부 검사 시에 방사선투과시험 방법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방사선투과시험 외에도 **영상초음파탐상시험검사를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은 영상 출력이 가능한 초음파탐상시험을 말합니다. (2015. 5. 시행)

얼마나 좋아질까?

안전 · 옥외탱크 용접부 검사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의 · 탱크 용접부의 안전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발행 2015년 11월 26일 | **발행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발행처** 국민안전처
주소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301 | **Tel** 02-2100-0365
디자인/인쇄 갑우문화사 | **Tel** 02-2275-7111

※ 사전 승인 없이 무단복제를 금합니다.